

왜 총장을 ‘우리’ 스스로 뽑아야 하는가

박 홍 규

영남대 법학과 교수



왜 직선제였는가

대학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듯이 총장직선은 대학민주화의 최우선표제였다. 정치민주화의 최우선표제가 대통령직선이었던 것처럼 총장직선은 대학민주화의 최우선표제였다. 대통령직선은 비생산적인 국론분열 등을 이유로 하여 군사정권에 의해 부정되어 소위 10월유신 이후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것이 6·29 전후의 민주화투쟁으로 16년 만에 다시 획득된 과정,

그리고 그것이 각 개별 단위 사회로 확산된 과정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 대학사회의 총장직선제도 그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힘겹게 그리고 처음으로 쟁취했다. 비록 정치민주화의 부산물이기는 했으나 뜻있는 대학인들이 나뉘고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것이다. 상당수의 교수들은 그러한 노력에 소극적이었고 심지어 냉담하기도 했으나, 그 누구도 대학의 자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총장직선에 불참하지 않았다. 그것

은 우리가 구가한 최초의 대학자치였다. 헌법에서부터 규정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처음으로 실천한 것이었다. 대학의 자주적 운영에 대한 최초의 경험이었다.

직선제 이전의 과거에는 정부 또는 재단이 총장을 뽑았다. 그렇게 뽑힌 총장은 ‘우리’가 아닌 ‘그들’에게만 봉사했다. 대학이 아니라 정부나 재단에게만 충성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총장을 좋아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적대관계에 놓이기도 했다. 필자는 대학에 발을 들여 놓고 10년을 그렇게 살았

다. 참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그들은 군림했고 권력을 자행했다. 그들은 학문의 자유를 짓밟았고 심지어 부정하는 작태까지도 일삼았다.

무엇이 직선제의 문제점인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직선제가 민주화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직선제와 마찬가지로 총장직선제도 민주화의 시작, 그것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그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뽑은 총장을 중심으로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와 교육을 심화하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대학행정을 더욱 민주화하고 개방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을 권위주의와 신비주의의 수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선거 자체의 문제이다. 모든 선거가 그러하듯이 대학의 선거도 처음부터 순수하고 완전할 수가 없었다.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가 그러하듯이 총장선거에도 부작용

이 따르기 마련이다. 더욱이 이제 겨우 시작한 제도이므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선거인 이상 당연히 후보자가 복수일 수밖에 없고 후보자를 중심으로 하여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파당'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다원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 '파당'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없다. 선거 후에도 그것은 지속될 수 있다. 그것을 '분열'로 과장하는 견해들이 있으나 항상적인 갈등 -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고유한 갈등 - 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이다.

그 파당이나 분열이 긍정적인 비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맥이나 지연 또는 학연을 중심으로 하여 고질적으로 생기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으나, 그것은 직선제 자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인의 비민주적인 자질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이다. 대학인인 만큼 객관적으로 그 인격이나 사상을 판단하여 투표해야 할 것이나, 우리의 모든 대학인이 반드시 그러하지 못하다. 특히 인사제도를 비

롯하여 대학의 여러 속성은 그러한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도 극복되어야 할 부정적 과제인 것에 불과하지, 그것을 이유로 하여 직선제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판되어야 하는 점은 일부 교수들의 비민주적인 성향과 작태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다수 교수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우리는 대학만이 아니라 많은 단위사회에서 직선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국민학교 학생들도 스스로 대표를 뽑고 있다. 어느 경우에도 선거는 문제를 낳는다. 게다가 대부분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유독 대학교수들의 선거만이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정말 그것만이 문제라면 교수들의 자질이 특히 문제인 것이지 직선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선제부터 문제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가 속한 사회로서의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느 사회의 구성원에 대해서와 같

이 대학인에게도 당연히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이다. 그러나 그것은 총장을 직선으로 뽑는 민주적인 제도에 의해 더욱 설득력 있게 확인될 수 있지, 그것에 의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총장이 민주적으로 교수와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선제는 그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선거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이유로 하여 총장직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대학이 정치판이 아니고 교수는 시정잡배가 아니므로 혼탁한 선거에 친하지 않다는 고상한 주장까지 있으나, 이는 대학과 교수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오해에서 생기는 것이다.

대학의 선거가 깨끗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부정할 사람은 없으나, 대학에서 선거를 몰아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학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아니, 대학도 하나의 사회라는 사실 자체, 그리고 민주사회여야 한다는 당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총장세미나 논의의 문제점

지난 7월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94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몇 대학총장들이 위에서 살펴본 직선제의 역사적 의의를 무시하고 그 부작용을 이유로 그 폐지를 주장한 점에서 몹시 실망스럽다. 특히 총장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소위 유신헌법의 대통령간선제를 합리화한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우리를 더욱 의아하게 만든다.

예컨대 국립대학협의회의 발제자인 강원대 문선재 총장은 직선제가 “대학을 비생산적인 선거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총장선거로 인하여 교수사회에 분파가 생겨나고 그것이 반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직선제가 학내 인사에게만 유리해 총장 후보를 학내외에서 찾기 어렵고, 교수들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선거에 참가하기 십상이어서 입후보자의 자질을 면밀히 검토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총장선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거나, 국립대학을 법인화하여 이사회를 최고의 결기구로 만들자고 주장한다. 사립대학협의회의 발제자인 경남대 박재규 총장도 직선제가 대학 공동체의 분열, 파당화, 소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총장선거에 나서본 적이 없는 필자로서는 위의 지적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 번이나 선거에 참여한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지적들에 대해 몹시 당혹스럽다. 필자의 한 표행사가 ‘비생산적인 수라장’에서의 난동이었다니 불쾌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학외인사를 추천할 수도 있었으나 학내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추천한 것이고 수십 년 이상 그 분들을 이는 입장에서 공정하게 투표를 했다. 그 경우 당연히 지지자들이 달랐으나 그것을 분열, 파당, 이기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인정하고 대학 발전을 기원했으며 여러 가지로 협조했다. 여기서 ‘협조’란 교수회나 각종 위원회에서의 총장 및 보직자들에 대한 비

판을 포함한 민주적인 그것이
있다. 그것을 총장들이 분열
이니, 파당이니로 인식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선제의 '근본적인 문제
점'을 드러낸 것으로 거론되
는 직선총장의 퇴진을 요구한
92년의 강릉대 및 연세대 '사
태'도 필자가 보기에는 그다
지 심각한 것들은 아니다(이
상의 인용은 신문, 잡지의 보
도에 의함). 강릉대의 경우
사전 약속과는 달리 총장이
교수회의 승인 없이 기성회의
예산을 마음대로 처리하여 생
긴 문제이며, 연세대의 경우
총장의 이중국적으로 생긴 문
제이다. 곧 총장들이 야기한
문제이지 교수들이 일부러 일
으킨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그러한 '사태'는 직선제를 실
시한 수많은 대학의 극히 일
부에서 생긴 것에 불과하다.
그런 예외적인 사태를 과장하
여 직선제 자체에 문제가 있
다고 볼 수는 없다.

총장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직선제 '폐지'가 아니라 '개
선'이라고 하나, 그 개선책이
천거위원회 제도이든, 이사회
제도이든 간에 직선제 폐지를
전제로 하여 간선제를 주장하
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직선은 대학의 대표인 총장
을 '그들'이 아닌 '우리'가
'우리' 중에서 직접 뽑는 것을
뜻한다. 물론 반드시 '우리'
중에서 뽑혀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동료 중에서 뽑고, 임기를 마
치면 다시 우리의 동료로 돌
아온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
다. 그것은 바로 대학 자치의
기본이다.

반면 간선제는 교수대표 몇
명 등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
회를 통하여 총장을 뽑자는
것이다. 그 경우 미국식 전문
총장의 공모제 등도 주장되고
실제로 최근 포항공대에서는
그것이 실시되기도 했다. 그
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 모두
가 스스로 뽑는 것과는 다르
며, 더욱이 '우리' 중에서 뽑
는 것과는 더욱 다르다. 전문
적 행정가로 초빙되는 것이
관계화된 미국의 대규모 종합
대학의 총장은 그 곳에서도
'우리'가 아닌 관료로서의 '그
들'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한
균열은 대학의 자치를 심각하
게 침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문적 기풍까지도 약화시키
고 있다. 그 결과 대학인은
연구와 강의가 아닌 행정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총장들이 지적한 문제이기
도 한 유능한 학내외 인사,
특히 학외인사의 초빙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경험에 대해
필자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
다. 그러나 필자가 몸담았던
국립대학과 현재 근무하고 있
는 사립대학의 경우, 대부분
의 교수들은 굳이 학외인사를
초빙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훌륭한 동료교수 중에서 총장
을 선출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학외인사를 모실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재의 직
선제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한
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 다시 직선제인가

우리는 직접민주주의가 완
전한 제도는 아니라고는 하여
도,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라
고 생각한다. 따라서 직선제
는, 그 부작용을 대학인의 자
질향상과 제도보완을 통하여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보완되어야 할 제도
로서, 특히 교수회와 위원회
제도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교수회에 의해 직선으로 뽑힌

총장인 만큼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수회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고,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들은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교수의 권리이기 이전에 대학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한 봉사차원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따라서 총장들도 교수회나 위원회 등에서의 비판적인 논의들을 '분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논의로 긍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비판을 비생산적인 아

수라로 여긴다면 우리의 역사는 다시 반동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특히 최근 지성의 위기, 대학의 위기, 학문의 위기, 사상의 위기, 교권의 위기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요즈음의 상황을 보면서 대학민주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다. 대학을 단순한 생산성의 차원에서 파악하여 제기된 직선제 폐지론은 그러한 위기에 편승하는 것으로까지 보인다.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진정한 대학의 대표로서의 총장을 필자는 대망한다. 그것은 교수들의 지성으로서의 자각과 민주시민으로서의 대오각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대학민주화의 전제인 직선제는 완성될 수 있다.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87년 당시의 상황에 비해 지금 무엇이 나아졌는가? ▶

박홍규/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일본 대관시립대 대학원 박사과정과 영국 Nottingham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미국 하버드 법과대학 객원교수를 지내고, 현재 영남대 법대 교수로 있다. 저서로 『노동법』, 『사법의 민주화』, 『한국과 ILO』 등이 있다.